

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2013년 주요업무보고

2013. 1. 22.

복지건강실

목 차

I	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	1
II	정책목표 및 방향	2
III	주요사업 추진계획	3
	①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복지기준 체감도 제고	3
	②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 도시 조성	8
	③ 차별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	12
	④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 안전망 강화로 건강도시 만들기	14
	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보호	18
IV	주요 현안업무	19
	① 서울시 자살률 확 줄이기	19
	②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	20
	③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추진	21

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

- 양적성장과 개발위주 시책의 후유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
 -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 증가
 -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중 비수급 빈곤층은 29만명
 - 경기침체, 사회양극화 심화로 노숙인 증가 및 만성화 우려
 - PC·만화방 등에 24천여명 상존, 거리노숙인의 27.7%가 10년이상 노숙생활
-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·자립요구 분출
 -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보건·복지·안전·일자리 수요 지속증가
 - 104만명('11년 10.2%) → 110만명('12년 10.8%) → 140만명('19년, 14.1%) → 195만명('27년, 20.3%)
 -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빈곤·질병·고독·무위 등 사회적위험에 노출
 - 노인빈곤율 45.1%, 노인자살률 10만명당 64.4명(OECD국가 최고)
-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위해요인 증가 및 동물보호 관심 증대
 - 자살률의 증가 및 기대여명 등 지역간 건강격차 심화
 - 서울시 자살률 증가(10만명당) : 17.1명('06년, 1,742명) → 26.9명('11년, 2,722명)
 - 식생활 안전요구 증대 및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
- 대시민 발표사업 실행 및 홍보 강화로 시민체감도 향상
 - '사람'중심의 복지시정을 대변하는 '복지브랜드' 개발 및 전파
 - 대시민 발표사업('12년) 실행 강화 및 대상별·시기별 맞춤형 홍보추진
- 사각지대 보완과 체계적 실행으로 서울형 신복지모델 완성
 - 시립병원 혁신을 통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
 - ※ 보건복지부에서 '보호자 없는 병원' 시범사업 추진(하반기 예정)
 - 찾아가는 적극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민 자살률 획기적 감소
 -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

정책목표 및 방향

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**사람중심도시, 서울 구현**

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**지역기반 복지공동체 조성**

수요자 맞춤형
서비스 제공

민·관 협업
체계 강화

현 장소 통
강 화

□ 주요과제

사 각 지 대 해 소 로
시민복지기준 체감도 제고

- 전달체계 개편으로 시민 복지체감도 제고
- 희망온돌 및 나눔이웃 활성화
- 시민체감 서울형 신복지모델 구축

어 르 신 이 행 복 한
인생이모작 도시 조성

- 신노년층 사회참여 지원 강화
-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
- 존중과 세대통합

차 별 없 는 장 애 인
자 립 도 시 실 현

- 장애인 차별해소 및 권익보장
-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로 사회참여 촉진
-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강화

공공보건의료 및 건강
안 전 망 강 화 로
건 강 도 시 만 들 기

- 시립병원 혁신과 달라지는 공공의료
- 시민 건강안전망 강화

사 람 과 동 물 이 함 께
행 복 한 동 물 보 호

- 동물복지 증진 기반 마련
- 동물보호 인식 개선

주요사업 추진계획

1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복지기준 체감도 제고

1-1. 전달체계 개편으로 시민 복지체감도 제고

- 주민센터 기능개편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**
 - 동주민센터의 종합상담, 방문복지, 사례관리, 민·관협력 확대 강화
 - 구·동간 업무조정 및 통반장·나눔반장 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·복지인력 확충
 - 시 시범운영안에 의거 자치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범운영(3월~)
 - 공모를 통한 시범 자치구(5개 이내) 심사·선정 : 독창성 및 구청장의 의지 등 고려
 - 종합상담·사례관리·민관협력·복지인력 역량강화비 등 지원(최대 1억원 이내 차등지원)
 - 시범운영과 동시에 모니터링 및 효과성 등 성과분석 진행
 - 성과평가에 따른 자치구 확대여부 결정('13. 하반기)

- 사회복지시설 혁신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(복지재단)**
 - 사회복지시설의 역할·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(2~8월)
 - 프로그램 중심의 '공간없는 복지관' 등 모델 개발 및 사업방식 발굴
 - '마을지향 복지관' 시범사업 추진(3~8월) : 사회복지관 등 8개소 대상
 - 마을공동체 지향의 주민 주도형 복지관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
 - 은퇴자 활용, 복지시설 명예관장제 도입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

⇒ 최일선 공공·민간 전달체계 간 상호 기능보완으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

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개선

- 별도 운영중인 금융상담센터를 통합하여 상담업무의 시너지 효과 제고

구 분	재무상담창구	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	금융복지상담센터
설치장소	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(17)	자치구(25)	자활센터(5)
상담대상	소상공인	일반시민	저소득 시민

- 민간위탁(복지재단 위탁) 심의 및 동의(2~3월), 사업개시(5월)
 - 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」로 일원화하여 시민에게 경제 및 복지서비스 동시 제공
 - ※ 10개소 설치 : 자활센터 5개소(존치), 재무상담센터 5개소(재무상담, 가계부채 상담센터 통합)
 -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지역센터(10개소)간 역할 정립·서비스 제공

1-2. 희망온돌 및 나눔이웃 활성화

□ 희망온돌사업 확산·체계화(복지재단)

○ 지속가능한 시민주도형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

- 자치구와 복지기관, 민간단체, 봉사조직들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: 394개
 - ※ 나눔이웃 40, 거점기관 103, 동복지협의체 201, 행복한방 사업 추진 50
- 희망온돌시민기획위원회 개최 정례화 : 16회(전체회의 4회, 소위원회 12회)
- 자생적 민간단체 및 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추진 : 회계, 행정교육 등

○ 시민,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

- 희망온돌 커뮤니티 맵을 통하여 자원봉사, 물품기부 등 '함께나눔' 기능 강화
- 페이스북,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시민단체와 연계한 나눔운동 전개

○ 계절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사각지대 해소

- '희망온돌 시원한 여름나기' 및 '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' 사업 추진

■ 서울복지법률지원단 ('12.7.30 개원, 서울시복지재단내, 변호사 등 6명 근무)

- ▷ 저소득 시민대상 법률상담(1일 평균 15건) 및 제도개선 관련 자문 실시
- ▷ '12년 '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' 사업시 찾아가는 「순회 법률상담실」 운영
 -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사례에 대한 공적지원 방안 마련

□ '나눔이웃' 활성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

○ 영구임대단지, 쪽방촌 등에 주민밀착형 '나눔이웃' 사업 추진(1월)

- 우선, 10개 지역(영구임대단지 8, 쪽방 2) 시범사업 후 28개 지역(영구임대단지 25, 쪽방 3) 순차별 추진
- 직능단체, 통·반장, 가스검침원 등 지역자원 활용, '나눔이웃' 활성화

○ 25개 자치구 '나눔이웃' 확대 : '12년 1,422명 → '13년 2,000명

- '나눔이웃'을 통한 '저소득층 지원 사업' 공모 추진 : 25개 자치구 40개 사업
 - 민간단체 또는 복지시설간 컨소시엄 구성 참여 및 협력기관의 구체적 역할 부여
- 25개 자치구 '나눔이웃' 대표협의체 운영 및 소그룹 모임 활성화

○ 활동내용

- 우리이웃 돌아보고 관심기울이기, 어려운 이웃 발굴 및 기관에 알리기
- 안부전화, 가정방문, 자원 연계, 도배장판 사업참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
- 우수사례 공모 및 우수활동가 표창, 다큐영상 제작 등으로 자긍심 고취

□ 추진방향

- 제도적 무료급식 및 희망온돌 위기·긴급지원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 적극적 발굴
- 저소득층이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희망식당 운영
- 저명인사 및 숨씨 있는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운영방식 적극 도입

□ 추진계획

- ① 기아제로(Zero)를 위한 발굴·지원체계를 씨줄 날줄 형태로 촘촘히 구축
 - 자치구, 동주민센터, 복지시설, 지역내 나눔이웃 등 민·관 협력을 통한 어려운 이웃 발굴·지원체계 강화
 - 복지시설 무료식당, 민간 무료급식 운영주체, 푸드뱅크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
- ② ‘능력만큼 밥값 지불’ 형태 :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형태의 ‘문턱없는 밥집’ 재개점
 - 폐쇄 직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생기반 마련
 -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토대 조성
- ③ 저축식당 형태 :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‘저축식당’ 운영 (영등포 지역)
 - 어려운 이웃이 식당 이용시 밥값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추후 목돈으로 지급
- ④ 커뮤니티 레스토랑 형태 : ‘추억의 도시락’ 운영(종로 舊허리우드극장 실버영화관 옆)
 - 일일 500~1,000여명의 어르신 관객 대상 여가 공간 및 저렴한 식사 제공
 - 종묘·탑골공원 주변 어르신거리 조성사업 연계, 어르신복지 테마공간 조성
 - 시범 운영 후,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커뮤니티 레스토랑 확대를 통해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
- ⑤ 동네식당 형태 :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마을공동체 기업형 ‘동네식당’ 운영
 - 복지관 등에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‘동네부엌’ 시범 운영 (상반기)
 - 음식솜씨가 좋은 시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, 소외계층은 무료
 -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활용(무료 또는 저임대료), 유명 외식업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기업형 식당 운영, ‘문턱없는 밥집’ 2호점 개점도 함께 검토

1-3. 시민체감 서울형 신복지모델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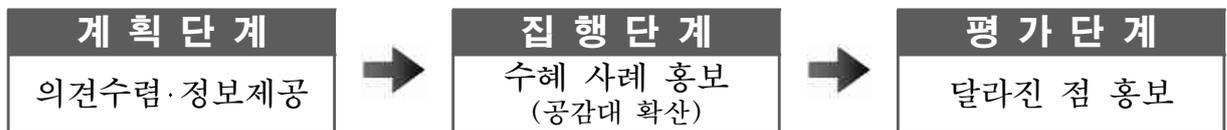
□ 추진방향

- ‘복지브랜드’ 개발로 ‘사람’중심 복지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
- 대시민 발표 복지사업 실행 및 대상별·시기별 맞춤형 홍보 추진
- 복지사각지대 보완계획 수립 및 체계화로 신복지모델 완성
- 민·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부서통합형 TFT 구성 추진

□ 주요내용

- ‘사람’ 중심의 복지시정 철학을 대변하는 ‘복지브랜드’ 개발 (2월~)
 - ‘박원순표 사람 중심의 복지’를 상징하는 통합된 이미지·슬로건 개발·집중전파
 - ‘희망서울’ 비전을 지향하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가치를 아우르는 복지 브랜드 네이밍 검토중 : (예시) 튼튼하고 촘촘한 울타리복지

- ’12년 대시민 발표사업에 대한 단계별·대상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



- 서울시민복지기준(12.10월 발표) : 이야기 형식 백서발간(3월), 재능기부 웹툰 제작(7월) 등
- 어르신 종합계획(12.10월 발표) : 어르신에게 영향력 있는 장소 및 매체 활용 홍보
- 건강서울 36.5(12. 7월 발표) : 수요 대상자에 따른 타깃별 홍보전략 구사
- 복지사각지대 보완계획 수립 및 체계적 실행으로 신복지모델 완성
 - 시립병원 종합개선 프로젝트 발표(5월)
 - 찾아가는 자살예방사업 추진(2월, 종합계획 수립)
 -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(청책워크숍, 시민 설문조사, 연구용역을 거쳐 9월 대시민 발표)
- 민·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부서통합형 TFT 구성 추진
 - 서울시민복지기준 자문위원, 관련 부서(복지,여성,경제,소통,마을공동체 등) 참여
 - 통합브랜드 확산 등 시민체감도 향상, 복지투자의 경제활성화 연계방안 모색

□ 추진경과

-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착수('12. 2월)
- 서울시민복지기준 대시민 보고서 발표('12.10월)
 - 서울시민복지기준 및 28개 중점사업(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등) 발표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4만명
- 지원내용 :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100%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 선정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지원
 - 생계급여(기초수급자 1/2), 교육급여, 해산·장제급여(기초수급자와 동일) 지원
- 추진방법 : 상반기 제도안내, 대상자 발굴 등 사전준비 후 하반기부터 최저생계비 60% 이하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
- 소요예산 : 27,360백만원(시비 100%)

□ 추진계획

-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(1월~)
 - 대상자 발굴, 행복e음 활용, 선정기준 논의 등 검토 자문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(1 ~ 3월)
 - 중앙정부에 저소득층의 금융자산과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의
 - ※ 복지부와 시간부의 협의체 구성, 정례적 회의 추진(1. 4. 복지부 4개부서 실무회의)
 -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
- 지원대상자 수요파악 및 모의 운영(1 ~ 6월)
 - 기초수급자 탈락가구,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등 기존자료 분석을 통한 수요 파악
 -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모의운영(5개구 이내) 연계 추진
 - ※ 사업 홍보 및 자치구·동 업무담당 교육 실시(1월~)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(7월)

2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 도시 조성

2-1. 신노년층 사회참여 지원강화

베이비부머 제2인생설계 지원

-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(1월)
 - 제2 인생설계, 사회공헌, 맞춤형 취업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 - 자치구 「인생이모작 지원센터」 설치 지원 : '13년 4개소
 - 건립비(10억원), 운영비(시설당 83백만원) 지원
 - 민간기관·단체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유도·제안 병행
- 베이비부머 엑스포 개최(KBS와 공동추진)
 - 시기/장소 : '13.10.3~10.6(예정), 서울광장·청계광장 일대
 - NGO,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중심으로 베이비부머 제2인생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시
 - 민·관 TF 구성(12명) : KBS 2, 복지관 1, 민간단체 전문가 5, 서울시 4

전문직 은퇴자 사회참여 확대

- 온라인 시니어 인재은행 구축(5월까지) :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內
 - 금융·경제·교육 등 전문분야 은퇴자 인력풀 구축('13년, 200명 발굴)
 - 기술분야(구두·금속·육가공 등) 시니어 마이스터(명장) 발굴
 -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의 다양한 활동분야 발굴로 노년기 자존감 고취
 - ※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현황 : 문화예술, 학습분야 등 8개 분야(1,842명)
- 신노년단체 육성 및 지원
 - 시니어단체 및 은퇴자의 지혜와 경륜을 사회공헌·재능나눔으로 활용
 - ※ 현재 등록된 노인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는 55개, 노년층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한국씨니어연합 등 5~6개 정도
 -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익목적의 노년단체·시니어 직능클럽(20㎡이상 사무실, 20명이상 노년회원) 등에 대해 운영비, 사업비(복지공동체) 등 지원

2-2.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

독거어르신 대상 맞춤형서비스 확대

- 독거어르신(140천명)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(3월 개시)
 - 서비스수혜자 생활실태, 수혜서비스(돌봄·무료급식 등) 현황, 민간지원 사항 등 실시간 관리
 - ※ '11년말 현재 독거노인 211천명 중, 장기출타·요양시설 입소·조사거부 등 제외한 140천명 관리대상 (2월부터 추가 전수조사 예정)
- 자치구별 통합 돌봄지원센터 설치확대 : '12년 2개소(마포, 강남) → '13년 8개소
 - 노인돌봄기본서비스, 재가노인지원센터, 재가관리사 등 분산된 돌봄기능 통합
 - ※ 6개 돌봄사업 : 수행기관 361개(종사자 2,153명), 수혜자 52,663명
- 민간자원 연계 돌봄 수혜자 확대 : 12,500명
 -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학교·종교단체·기업 등 민간자원 연계·안부확인 등 일상생활지원
 - 독거어르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발굴·연계
 - 1학년 결연 2,500명, 신도가족 1:1 결연 5,000명, 민간기업 후원연계 5,000명

비수급 및 재가 어르신 건강지원 강화

-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(467명)
 -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 중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
 - 장기요양시설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
 - 시설입소 : 월 315천원, 재가서비스 : 월 190천원
- 입원치료후 회복기 재가어르신에게 일정기간 간병서비스 지원(4,500명)
 - 최저생계비 180%이하 어르신 대상 간병서비스 지원(1인당 최대 20시간 1회)

□ 지역밀착형 복지인프라 구축

○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

- 수동적 프로그램 → 수혜자 발굴·방문서비스,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도적 역할
- 어르신만 이용 폐쇄 공간 →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

○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

-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확대 : 10개소(170개소 → 180개소)
- 노인요양시설 확충 : 12개소(446개소 → 458개소)
-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: 11개소(37개소 → 48개소)

□ 활기찬 여가문화 지원

○ 노년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

- 신노년층 선호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프로그램 선정·지원
예) 시니어 K-pop경연, 시니어 패션쇼, 어르신 짝 프로그램 등
- 서울노인영화제(서울시장상 시상), 어르신연극제(신설) 개최 지원
- 어르신 선호분야 문화·체육경연대회 서울시장배 대회 개최
 - 게이트볼·장기(확대), 당구·바둑·서예·회화·사진(신설)

○ 경로당 기능 혁신 및 활성화

- 경로당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: 자치구, 대한노인회 등 관계전문가 5~10명
-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: 이모작센터 교육과정 운영
- 경로당 활성화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(자치구별 2개소 이상)
 - 학습, 사회봉사, 동아리, 창작공방, 공동작업장, 도시농업, 돌봄제공, 시설개방 등 8개 유형

□ 노인·장애인 관련 복지용구 산업개발 지원

○ '13년 서울형 R&D 공모사업 시범 추진(5~6월)

- 우선개발이 필요한 사업 발굴(복지건강실), R&D 지원분야 공모(경제진흥실)

○ 사회적약자 기업 및 장애인생산품 전시 판매장 확충 : 10개소(총 20개소, 카페형)

- 건립예정인 장애인리더십센터(산업인력공단)내 연구소 및 상설전시장 설치

○ 복지용구 전시회 및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(세계노년학대회, 베이비부머엑스포)

2-3. 존중과 세대통합

어르신 존중문화 확산

- 사회공헌 어르신·단체 발굴 및 복지공동체 사업 지원
 - 매년 노인의 날(10.2)에 긍정적 어르신像 정립에 기여한 단체·개인 발굴 시상
 - 베이비부머 엑스포 연계 추진
 - 어르신의 역할정립과 자존감회복 위한 복지공동체 사업 공모 지원(20개)
 - 할아버지 한자교실, 할머니 동화교실, 어르신 스포츠 재능나눔 봉사 등
-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: 세대통합형 콘텐츠 유도
 -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TV프로그램 증가
 - 가이드라인 연구('13, 복지재단)→가이드라인 개발·보급('14)→평가('15)
 -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5월, 복지재단·방송관계자 및 어르신 당사자 등)

세대간 소통 지원강화

- 세대융합 문화예술 활동 지원(20개사업, 각 5백만원)
 - 노인복지관·학교·청소년수련관 연계를 통한 세대융합 문화활동 지원
 - 스마트폰·SNS 등 청소년문화 공유교육 및 복지관·학교·청소년수련관 결연추진
-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 개최(2회)
 - 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 또는 전문가들이 주제별 경험담 공유·해결책 모색
 - 4월, 10월 중 공모 선정, 노년단체와 공동추진
- 독거 어르신·대학생간 주거 공유 지원(15가구)
 -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을 매칭하고 입주후 청년은 어르신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서비스(장보기, 외출지원, 청소 등) 제공
 - 표준화 매뉴얼 작성 및 홍보 강화(3월~)

3

차별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

3-1. 장애인 차별해소 및 권익보장

-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·운영 : '13. 4월
 - 정기적 시설방문, 인권침해·차별사례, 교육, 상담 등 실시
 -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 팀장, 주무관 인권증진교육 실시 및 매뉴얼 개발
- 인권침해 시설 운영책임자 「원스트라이크 아웃제」 시행
 - 인권지킴이단 362명(51개 시설), 인권감독관제 77명(17개 區) 등 활용
- 「24시간 온라인 인권침해신고센터」 운영
 - 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, 가혹행위 등 신고사항 접수 후 즉시 조치
-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(연8시간), 시설 인권실태조사 정례화(연2회)

3-2.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로 사회참여 촉진

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

-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: 월 2,360명(10,370명 → 12,730명)
 - 지원대상 : 장애1급 → 장애1·2급, 아동급여는 성인수준으로 상향
- 활동지원 탈락 틈새계층 자체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(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계)
 - 기준 미달(인정점수 200~220점 미만)로 탈락한 장애인 지원확대 : 200명
-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: 7개소(25개소 → 32개소)
 - 등록 장애인 수 2만명 이상 자치구 : 2개 센터 지원

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교통수단 확대 운영

-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·정비 : 1.6% P 확대(87.4% → 89%)
 -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단(126명) 점검결과 미흡시설 시정조치
-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확산 : 4개소(16개소 → 20개소)
 - '14년까지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인증제 추진
-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편의지원 사업 : 100가구
 - 문턱제거, 화장실 개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설치
-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내실화 : 운전원 40명 신규채용
 - 탑승률 제고(운휴차량 40대 활용 : 1일 운행 95대 → 135대)

3-3. 지역사회 자립생활 인프라 확대 및 복지서비스 강화

지역사회 밀착형 소규모 장애인시설 운영 확대

- 소규모 장애인시설 확충 : 16개소(318개소 → 334개소)
 - 공동생활가정 6, 주간보호시설 5, 단기거주시설 5
-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시설 인증제 시행 : 9개소
 - 연장운영 주간보호시설(조·야간 및 토요일) : 3개소
 - 최중증 장애인 전용시설 : 6개소(주간보호 3, 단기거주 3)

탈 거주시설 장애인 체계적인 전환서비스 지원

- 거주시설 장애인 DB구축 및 입·퇴소 지원 강화
- 체험홈 운영 및 자립생활가정 확충 : 58개소
 - 자립생활 체험홈 25개소, 자립생활가정 33개소(6개소 확충)
-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: 64가구(1 가구당 70~80백만원)

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

-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
 - 장애인거주시설(43개소)과 장애인복지관(45개소) 1대1 결연
 - 지역사회 정착 지원, 통합·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탈시설 역량강화 지원
-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거주시설 네트워크 구축
 - 지역 IL센터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: 10개소 선정

'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' 지원대상 확대

- 지원확대 : 10천명(23천명 → 33천명)
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→ 차상위계층까지 대상 확대
- 지원금액 : 월 3만원(전액시비)
 - ※ 기존 장애수당 명칭 변경 : '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'(시민복지기준 반영)

4

공공보건의료 및 건강 인건망 강화로 건강도시 만들기

4-1. 시립병원 혁신과 달라지는 공공의료

□ 시립병원 운영혁신

- 개선대상 : 직영병원, 서울의료원, 민간위탁병원 등 9개소
 ※ 서울의료원 : 의료기관 인증 획득(의료기관 평가인증원, '13.상반기)
- 추진체계 : 총괄 TF(총괄 : 복지건강실장), 실무추진 TF, 자문그룹
 - TF정례회의, 실무워크숍, 전문가 자문회의,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
- 시립병원 6대 혁신과제(안)

6대 혁신과제(안)	세부 추진과제
서울시립병원 체계 정립	• 권역별 시립병원 공급·관리체계 개선방안 • 어린이·노인·정신·응급·감염병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
단위 시립병원 기능 정립	• 서울시립병원체계 내에서의 기능 정립 • 서울시 대표브랜드로 특성화 영역 구축
책임경영체계 구축	• 조직·예산·인사관리 R&R(Role and Responsibility) 정립 • PDS(Plan-Do-See) 관리체계 구축
인재확보체계 구축	• 우수 의사·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 • 의사·간호사 육성체계 구축 방안
관리운영체계 구축	• 직영병원의 적정 운영형태 결정 • 통합의료원 또는 의료공사 설치 방안 검토
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	• 시민참여 활성화/시민권리 보호 강화 • 찾아가는/맞춤형/밀착형 서비스 확충 •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등

- 추진일정
 - 시립병원 종합개선 초안 보고 및 TF 전체회의 개최 (1월)
 - 병원관계자 워크숍, 설명회, 시민단체 및 병원협회 의견수렴 등 (2~3월)
 - 시립병원 종합개선 프로젝트 수립(4월) 및 대시민 발표 (5월)

□ 환자안심병원(보호자 없는 병원) 운영 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연계 추진

- 서울의료원 180병상 운영 (서울의료원 총 623병상의 약 30%)
 -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의사판정,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지원(이용료 무료)
 - 간호사를 확충하여 질 높은 간호·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병부담 완화
 - 인력 : 총 172명 (기존 65명, 신규총원 107명 -간호사 79, 보조원 24, 사회복지사 4)
- 시범운영 실시(1.17~), 관련조례 개정 추진(2월)
 -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업 추진 기반 마련

□ 환자권리 증진 및 인권피해자 치유지원

○ 환자권리 옴부즈만 운영

- 의료피해 상담 및 권리구제, 다빈도 의료민원 기획조사, 환자권리 캠페인 등
- 공모심사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선정(2월) 및 운영 (3월~)

○ 인권피해자 통합적 치유지원

- 공권력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자 대상으로 정신·심리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, 교육 등 실시
- 공모심사 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선정(2월), 사업시행 (3월~)

□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 — 11개소 확충 ※ 현재 총 10개소

○ 표준형 보건지소 지원 : 7개소(15억원)

-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질병예방 및 관리, 재활보건사업 등 1차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○ 참여형 보건지소 지원 : 4개소(7억원)

- 영구임대단지, 건강 취약 동의 복지관, 동주민센터 등을 거점으로 시민참여 건강서비스 지원

□ 시민참여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

○ (가칭) ‘서울시민건강위원회’ 설치·운영

- ‘서울시민건강위원회’ 설치운영 조례안 마련 및 실무운영단 구성운영(상반기)
- 서울시 건강정책 자문 및 시민참여 확대, ‘건강서울 36.5’ 성과 평가 등(하반기)

○ 시민건강포인트제 도입

- 고혈압, 당뇨병 환자 참여로 자발적 건강관리 유도(7개구 시범운영)
- 민간의원(환자 등록관리), 서울시(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마련 등), 보건소(건강포인트 지급 등)간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
- 등록, 재진, 교육, 필수검사 등에 따른 포인트 적립(최대 20,000포인트/년)
→ 등록의원에서 검사, 예방접종 등에 현금처럼 사용

○ 건강증진 협력약국 운영

- 약국 등록환자 대상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금연 희망자 발굴·관리
- 지역약국 자살예방 gatekeeper 활동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 사업실시
-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구 및 개별약국(2개구 40개소) 선정(3월)

4-2. 시민 건강안전망 강화

□ 응급의료서비스 강화

- 서울특화 응급진료센터 및 서울 건강콜센터 ('12.12.24 개설) 운영
 - 서울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확대 운영 (2개소→3개소)
 - 2개소(서울아산·이대목동병원) → 서울대병원 추가(6월 예정)
 - 119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건강콜센터 설치 운영
 - 24시간 전문의 건강상담 (상근 8명 : 전문의 5, 간호사 3) 및 온라인 상담
 - 5개 언어(영, 중, 일, 몽골, 베트남) 24시간 의료통역 서비스 제공
 - 지하철, 버스, 전광판 등 대시민 홍보 활성화
- 야간·휴일 진료기관 운영 확대 : 5개소 (45개소 → 50개소)
 - 낮시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야간 휴일에 발생한 경증환자 대상
 - 평일 23시, 토·일(공휴)요일 18시까지 운영
 - 119, 120다산콜, 자치구를 통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안내 기능 강화

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

- 필수예방접종 무료 확대
 - 만 12세 이하 영유아·아동(약 44만명), 65세 이상 어르신(약 109만명)
 - '13년 영유아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추가 확대
- 임신부·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
 - 선진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산전 및 아동기 건강발달 프로그램 도입
 - 임신부 가정방문 프로그램(임신 28주 이내) :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
 -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사정 프로그램(신생아~만2세) : 건강발달 스크리닝 등
 - 2~3개 자치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선정(취약동 중심)
- 아동치과 주치의제 실시 : 3만명(초등학생 2만명, 저소득층 아동 1만명)
 - 구강검진, 보건교육, 질병예방 진료 등 실시
- 대사증후군 관리확대, 심·뇌혈관 질환 예방 : 19만명 확대(61만명→80만명)
- 대사증후군 유병자 대상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모형 개발(공모를 통한 민간위탁)
-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사업 추진(자문단구성, 시범보건소 공모)
 - 지역별, 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른 건강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: 1만명 확대 (46만명 → 47만명)
 - 치매환자, 고위험군, 정상군 등 증상에 따른 맞춤형 등록관리서비스 제공

□ 7대 발암물질 예방·관리 대책 추진

- **환경성질환 유발요인 연구** (보건환경연구원)
 - 자동차 실내공기질 오염도 및 생활용품(물휴지, 치약 등)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 등
 - 어린이집 등 부유세균, 실내공기질 등 검사 및 실내환경 컨설팅 실시 등
- **서울시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추진**
 - 암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용역 실시(1월)
- **환경보건사업 지원단 운영 및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마련**(상반기)
- **생활속 환경보건 예방·관리 로드맵 수립**(상반기)
 - 중장기적 환경보건정책 방향 제시 및 건강위험요인 사례분석
 - 취약 민감계층(영유아, 임산부 등)에 대한 실천적 예방교육 실시

□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

- **서울시만의 고유 브랜드를 지닌 식품정책 수립 : 시민공모 추진**
 - 비만을 감소, 나트륨 저감실천, 채식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개별단위 전략 수립(20개 내외)
 - 서울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로드맵 작성(뉴욕 등 선진도시 벤치마킹)
- **「음식점 등 가격표시제」('13.1.1~) 조기정착으로 시민의 이용편의 제고**
 - 부가세·봉사료를 포함한 최종지불 가격, 식육100g당 가격, 음식점 외부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등
 - 시·자치구·민간과 연계, 현장 방문 집중 계도 및 언론매체 홍보
- **먹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**
 - 목 표(위생법규 준수율) : 93%('12) → 94%('13)
 - 음식점 등 대상 맞춤형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제시, 주방 자발적 공개 참여 유도
- **식중독 발생 위해 요인 제거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**
 - 목 표(인구 백만명당 환자 수) : 80명('12) → 75명('13)
 - 시교육청, 외식업중앙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, 신속대응체계 마련
 - 소규모 집단급식시설(2,100개소) 대상 “찾아가는 급식안전 지도” 서비스 시행
- **농수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**
 - 시중유통 농수축산물의 수거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축산물 신속 폐기
 -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집중 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
 - 5개소('12) → 10개소('13) → 15개소('14) → 25개소('15)

5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보호

5-1. 동물복지 증진 기반 마련

'동물복지 종합계획' 수립 추진

- 시민·동물보호단체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 -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워크숍 개최(3월), 시민 설문조사(4월)
- 동물복지위원회 구성(10인이내, 3월) 자문실시
- 동물보호정책 개발 연구용역 추진(4~8월)

'동물등록제' 추진('13.1월~) :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('13년 목표 845천마리, 1,300천마리의 65%)

- 현 황 : 대행업소 630개소 지정, 동물등록(1.21기준) 12,722건
- 등록제 실효성 확보 방안
 - 제도개선 : 등록 신청지 전국 확대, 내장형 칩 방식으로 일원화 등 17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(1.10)
 - 홍보강화 : 등록 인증샷 페스티벌, 전광판, 지하철 등 홍보, 동물등록 행사 마이크로칩 안전성 확보(기준 강화, 오피니언 리더 신문기고 등)

5-2. 동물보호 인식 개선

반려동물 한마음 축제

- '동물생명존중헌장' 및 '서울특별시 동물의 날' 제정·선포
 -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, 시의회 의견수렴 후 추진
 - ※ 3.6(제돌이 방류결정일), 9.28(동물보호과 신설일) 등 택일
- '동물의 날' 과 연계, 반려동물 한마음 축제(동물단체 주관, 서울시 후원)

애견공원(놀이터) 설치

- 내 용 :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"반려동물 문화공간" 설치
 - 검토장소 : 서울숲, 보라매병원, 어린이대공원, 북서울꿈의숲 등(1개소 시범운영)
- 추진계획(1 ~ 5월)
 - 여론조사(1~3월) → 제도적 근거마련(4~5월) → 설치 및 운영방안 수립(5월)

주요 현안업무

1 서울시 자살률 확 줄이기

자살취약지역 및 고위험대상 집중적 보호, 신속한 자살위기대응 등 적극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민 자살률 획기적 감소

※ 자살자수 변화 : 2,622명('09) → 2,668명('10) → 2,722명('11) → 2,500명('13.목표) → 2,000명('15.목표)
(10만명당 자살률) (26.1명) (26.2명) (26.9명) (25.1명, 6.7%감소) (20.4명, 24.2%감소)

□ 추진방향

- 임대주택단지 등 자살취약지역, 독거노인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자원과 역량의 「선택과 집중」으로 자살률 확 줄이기
-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적 자살예방사업추진
- 서울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「생명존중」 사회문화 조성

□ 추진계획

-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확대 : 5개구('12년) → 25개구('13년)
 - 자살 다빈도 65개동 및 영구임대단지, 쪽방지역 등 취약지역 집중관리
 - 복지관내 '열린 상담창구' 설치 및 편지함 등 은둔형 주민의 소통통로 마련
- 자살보도 규제를 위한 시차원의 「자살보도 권고안」 마련
 -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자제 및 유명인에 의한 모방자살 예방
 - 해외사례(핀란드) : 자살에 대한 구체적 묘사없이 “사망했다”, “사망한채 발견됐다” 식으로 단편적 사실 위주 보도
 - 현재, 언론협회 및 언론사의 자율적 규정 및 윤리강령 수준으로 강제성 미비
 - 11-12년 복지부 방송사 자살관련보도 모니터링결과 1,303건 중 52.3%가 권고기준 불이행
- 민·관 협력적 자살예방추진을 위한 「거버넌스」 구축
 - 자살예방사업 민간단체 육성 지원(Social Impact Bond 활용하여 공모)
 - 경찰청, 교육청, 종교단체, 시민단체 등 자살예방기관과 MOU체결
 - 사이버공간의 자살유해사이트 감시단 「100인 시민옴브즈맨」 활동
- 독거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보호서비스 강화
 - 독거어르신 1:1 결연 추진 : 12,500명
 - 1학급 결연(2,500명), 신도가족과의 결연(5,000명), 민간기관 후원연계(5,000명)
 - 청소년 위기상담 및 예방교육 : on-off라인 상담코너, 「희망의토닥임」 학교지원
 - 자살유가족 적극보호 : 전문상담서비스 및 「자작나무」 자조모임지원
- 자살위기사 긴급대응서비스 강화
 - 자살예방 핫라인(1577-0199) 24시간 상담 : 회선보강 2회선('11년) → 3회선('13년)
 - 자살시도시 경찰(112), 소방(119), 자살예방센터 연계 긴급출동

2

「독립의 언덕」 조성

서대문독립공원을 민·관 합동으로 독립과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고취시키는 대표적인 독립운동 성지로 품격있게 조성하여 향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

□ 추진현황

-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 계획 방침 수립(부시장 방침 583호 '12.11.9)
 - 광복회 및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에 의견 합치
- 「독립의 언덕」 민·관 조성위원회(추진단장 : 행정1부시장) 구성 : '12. 11월
 - 서울시 TF : 총괄실(복지건강실장), 관련 실·국장(5부서)으로 추진단 구성·운영
 - 외부 민·관 TF : 정부기관(국가보훈처, 문화재청 등)과 시민단체(광복회, 민족문제연구소 등)는 구성완료, 문화재전문가 및 공공건축가 등은 구성 중

※ 구성된 TF (서울시, 국가보훈처, 민간단체 등) 수시로 협의 진행 중(10회)
-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: 400백만원

□ 추진계획

-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안 업그레이드 추진 : '13. 1~2월
 - 「독립의 언덕」 조성 배경, 기본방향, 주요 콘텐츠 등 가이드라인 설정
 - 민·관 조성위원회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품격 있는 조성안 업그레이드
-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: '13. 2월
 - 서대문독립공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(근린공원→역사공원) 용역 발주
- 서대문형무소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추진 : '13. 2~12월
 - 국가지정문화재인 서대문형무소, 독립문 반경 100m 이내(건축물 신축금지)에 건립토록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추진
- 순국선열추모관 설치관련 토지사용(교환) 검토 : 서울시, 국가보훈처

3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추진

노숙인 동사 사고를 계기로 추진 중에 있는 사례관리카드 작성, 상담활동 전개 등 산재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

□ 거리노숙인 현황

- 75개 산재지역 노숙인은 '13. 1. 3일 기준 215명에서 1.17일 기준 181명으로 감소
 - 노숙인시설 입소, 은평병원 입원, 알코올해독센터 입소 등
- 서울역 등 밀집지역의 경우 응급 대피소 등 시설 이용으로 거리노숙인 대폭 감소
 - 562명('12.10) → 457명('12.11) → 351명('12.12) → 282명('13.1.16)

□ 추진내용

- 거리노숙인 「사례관리카드」 작성 : 1.17(목) 현재
 - 산재지역은 138건 완료, 87건 작성 중이며, 밀집지역은 106건 작성
 - 자치구별 노숙인 시설 지정하여 상담 및 카드작성 지원 : 25개 시설 32명
 - 산재지역 장소별 노숙인 : 181명

계	지하보도	지하철역사 /화장실	고가 밑	공원지역 /화장실	하천변	기 타
181	13	39	10	41	12	58

- 자치구별 산재 거리노숙인 예방순찰 및 상담활동 전개('13. 1. 8~)
 - 영하 5℃ 이하시 기 작성한 순찰노선도 활용하여 산재지역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일 2회(심야시간대 포함)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 전개
 - ※ 영하 10℃ 이하시에는 복지건강실 직원 25개구 순찰활동 지원 - 2회 실시
 - 순찰시 주요 노숙장소 소재 여부, 침낭 등 응급물품 파악·지급, 건강상태 등 확인
- 병원연계 17, 시설연계 30, 응급구호물품 지급 147, 상담 165건

- **정신과 전문상담팀 활동 ('12.12.3~)**
 - 정신과 전문의(1),정신보건전문요원(4) 등으로 2개팀 7명이 활동
 - 거리상담원 및 자치구 요청에 따라 현장 출동, 상담·진단·입원조치
 - 60명 조치 : 정신병원 23, 재활시설 17, 주거지원 12, 귀가 등 8명

- **노숙인 위기대응콜(☎ 1600-9582) 홍보계획 및 활동실적**
 - 지하철, 공원, 경찰서 등 포스터 및 스티커 배포 예정(각 1만부, 1.23~)
 - 옥외광고탑 등 영상매체 및 지하철 모서리광고 등 2,650건 게시(1.21~)
 -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(1.17~)
 - SNS(서울마니아, 페이스북, 미투데이) 게재(1.10~)
 - '12.11.15부터 접수 373, 시설입소 요청 29, 현장 응급출동 18, 상담문의 313건

- **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응급잠자리 및 쪽방 확대 : 80명, 50실('13.1.8~)**
 - 응급잠자리 320 → 400명(80명↑) : 영등포보현의집 공사완료(1.19)
 - 응 급 쪽 방 70 → 120실(50실↑) : 서울역, 영등포역 주변

- **경찰청 등 유관기관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**
 - 서울경찰청 : 노숙장소 및 취약지역 순찰과 지구대 노숙인 현황자료 공유 협조요청(1.15, 복지정책관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방문)
 - 소방재난본부 :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119 출동 협조
 - 노숙인 시설 및 시민단체 : 지정된 자치구 출장, 상담 및 사례관리카드 작성 지원
 - 푸른도시국 : 유연근무제(06~22시, 2교대)를 실시하여 공원화장실 주·야간 순찰 및 위기노숙인 발견시 응급조치
 - 4개 시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: 완치시까지 입원치료 및 퇴원시 노숙인시설 연계 조치

향후 추진 일정

- **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: '13. 1.24일경**
 - 노숙인 현황 공유, 애로사항 및 문제점 논의, 기관간 협조사항 전달 등

- **특별보호대책 지속 추진 : '13. 3.15일까지**